

정부 통치성에 대한 연구 :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

- 푸코의 자기통치(governance of self)를 중심으로 -

양세진¹⁾

푸코가 1961년 『광기의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84년 마지막 강의였던 『진리를 말하는 용기』까지 지속적으로 물음을 가진 주제는 ‘권력관계’였다. 권력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권력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구였다. 권력이 규율과 규제로 자기관계와 타자관계를 통해 어떻게 주체를 대상화하고, 예속된 주체를 생산하는지, 특히 권력의 미시물리학, 권력의 경제학, 규율권력, 통치성, 생명정치 등 권력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권력의 존재방식을 드러냈다. 통치이성 혹은 통치합리성으로 이해되는 통치성은 어떻게 개인을 분리하고 개별화하는지를 물었으며, 나아가 인간존재를 인간 종으로 다루는 생명통치로의 전환을 통해 인구 전체를 통계적 대상으로 여기는 통치성을 냉철하게 드러냈다. 본 연구는 권력관계와 통치성에 대한 물음을 넘어서 권력관계에 의해 예속된 주체로 주체화하지 않는, 그래서 저항하고 거부할 권력에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는 주체되기에 대해 탐색하였다.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는 푸코가 마지막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캐물었던 주제였다. 국민주권시대 정부의 통치방식에 대한 예비적인 작업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우리는 자기통치가 가능한 한에서 타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권적 주체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목 차

I. 서론	2
II. 권력의 미시물리학에서 통치성으로	3
1. 권력의 미시물리학	3
2.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의미	6
III. 주체화, 자기통치, 주권적 주체	8
1. 자기통치하는 주체: 주체화하는 주체	8
2. 자기통치하는 주체되기: 파르헤지아(parrësia)	9
3. 자기통치하는 주체되기: 자기돌봄과 배려의 기술	13
IV. 결론: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를 위한 정부의 통치성	14
V. 참고문헌	16

1) 소설이노베이션그룹 대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I. 서론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부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을 통치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통치하며, 어떻게 통치하는 것을 자신의 본래적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실천학문으로서 행정학은 정부의 통치에 대해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가?’ 관점을 다르게 해서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통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가?’ ‘정부 없는 통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정부를 넘어선 통치(beyond government to governance)’에 대한 물음이 깊어진 만큼 ‘정부의 통치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정부의 통치는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물음이 다시금 강렬하게 제기되는 시점에 우리는 ‘타자를 대상화하고 예속화하는 통치성’을 넘어 ‘자기통치가 가능한 한에서 정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권적 주체되기’라는 푸코의 자기통치 개념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주권적 시민통치 시대에 정부 통치의 존재방식에 대한 실천적 물음을 던져줄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 통치성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푸코의 철학은 권력관계에 대한 물음과 통치성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행정학, 정치학, 법철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²⁾. 푸코가 던진 통치성에 대한 물음은 주체를 대상화하고 예속화하는 권력의 작동에 대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Foucault, 2012b). 정부의 통치가 인간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러한 정부의 통치 아래 인간은 점점 더 순종적으로 길들여지고 예속화된 주체로서만 주체화될 위험이 있다. 혹은 인간에 대한 정부의 통치가 지금은 선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러한 상대가 되도록 다양한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 뉘달하면서 내몰게 될 것이다. 그러한 뉘달의 통치에 순응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말 것이다. 푸코가 정부의 통치성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을 집착스럽게 붙잡고 있는 이유는 권력의 미시물리학, 권력의 경제학에 기반한 통치이성은 권력이 숨 쉴 수 있는 찰나의 시간에도,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찰나의 공간에서도 주체를 대상화하고 예속화하려는 본성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체 권력을 일순간에 전복하거나 재구성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도

2) 신충식.(2009).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한 통치성 연구, 「정치사상연구」, 16(2), 이문수.(2009). 통치성의 관점에서 본 관방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 푸코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이문수.(2009). 통치, 통치성,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이정희.(2011). 미셸 푸코의 통치성의 계보학-‘국가이성’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1), 홍성민.(2008).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해석: 후기 푸코의 자유주의 사상, 「프랑스학 연구」, 45, 홍태영(2012).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46(2). 임미원.(2016). 푸코의 통치성 분석에 대한 기초적 고찰, 「법철학연구」, 19(1).

안 된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우리의 물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정부의 통치는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향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푸코에게 권력에 대한 물음은 주체화(subjectivization)의 3가지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권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처벌하는 권력, 규율하는 권력, 통치하는 권력이다. 특히 통치하는 권력은 절대적인 주체를 상정한다. 절대 군주와 같은 존재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둘째는 권력에 대한 복종과 종속이라는 측면에서 권력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예속된 주체를 상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한 이해는 금지하고, 명령하는 권력행사 주체와 이러한 규율하는 권력에 응답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예속된 주체를 상정하지만, 푸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 번째 주체화의 존재 방식으로 자기통치하는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다(Foucault, 1995b). 자기통치하는 주체는 자기인식을 넘어 자기 돌봄과 자기배려의 주체이며,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가진 주체이다. 본 연구는 푸코가 제시하는 세 번째 주체화의 존재 방식인 ‘자기통치하는 주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를 열망하는 국민주권시대에 정부통치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자기통치하는 주체들과 어떤 관계맺음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 본 연구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진행된 푸코의 마지막 2년 동안의 강의인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1982~1983), 『진리를 말하는 용기(The Courage of Truth):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 II』(1983~1984)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II. 권력의 미시물리학에서 통치성으로

1. 권력의 미시물리학

1961년 박사학위 논문인 『광기의 역사』에서 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까지 근 20여 년 동안 인간과 세계의 본래적인 구조로서 권력 관계를 탐색한 푸코에게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Rawls, 2006)³⁾’로서 정의(Justice)로운 사회는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사유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권력은 소유되거나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임을 강조한 푸코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통해 모든 관계는 권력관계임을 주장했다. 국가와 제도가 작용시키는 이른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인데, 모든 조직과 제도,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다.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3)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구성원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라고 불렀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그러한 원칙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Rawls, 2006:584).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권력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과 제도의 관계망 속에서 항상 활동 중인 능동태인 것이다. 즉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자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또한 피지배를 복종된 상태로 연장시켜 주기도 하는 영향력이다(Foucault, 2012a:57~58). 권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다만 단순하게 일종의 의무 내지 금지로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사람들을 거쳐 가고, 모든 사람들을 거점으로 삼는다. 권력은 개인을 재생산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개인은 권력이 적용되는 지점이 아니라, 권력이 운반되는 도구에 불과하다⁴⁾. 그렇기에 모든 관계 속에 권력은 작용하며, 모든 관계는 권력관계인 것이다(Foucault, 2012a:58~59). 모든 관계에 작동하는 미시 권력에 대한 전복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방식과 같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혹은 단기간에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푸코에게 정의로운 권력관계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푸코에게 주체는 허상이며, 불안하고 궁핍하며 허약한 대상이다⁵⁾. 그래서 작동하는 권력, 처벌하는 권력, 통치하는 권력에 예속된 주체로 자신을 주체화하는 주체는 죽었다고 보았다.

『감시와 처벌』에서 제시된 것 처럼, 초기 푸코에게 주체에 대한 물음은 대단히 어렵고 비판적이었다. 주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대상화하는 구성 주체(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감시하고 규율하고 처벌하는 주체), 주체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푸코 자신은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Foucault, 1995a). 1960~1970년대 푸코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진리와 권력의 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국가에 대한 앎, 전체로서의 국가의 통치에 대한 앎과, 최고 통치자의 앎이 같아지고, 따라서 앎을 가진 권력이 곧 진리가 되는 순환구조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푸코는 ‘진리의 통치’라 말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앎이야말로 어떤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앎에 비해 진리의 지위를 갖기에, 국가에 대한 앎을 소유한 최고 통치자와 정부는 당연히 진리의 담지자가 되고 진리의 수호자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심급이고 판단자이고 규정자이다. 진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데, 이때 재생산되는 것은 정부의 통치에 복종하고 예속되는 것을 자기화하는 주체, 예속된 주체를 생산하는

4)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정해진 관계가 아닌, 사회 전체를 통해 퍼져 있는 관계의 체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권력의 피동체라기 보다는, 권력이 행사되는 ‘장(place)’임과 동시에 권력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권력관계 속에서 개인은 단순히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혹은 제도와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Mills, 2008:76).

5)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그 자체에서 그 인간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서 행해지는 예속화의 성과인 것이다.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권력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 안의 한 부품인 것이다(Foucault, 2012a:62~63).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를 진리로 요구받는 자들에게 국가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물음은 권력의 체계로부터 진리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이미 권력이기에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세계에 스며들어서 작동하는 진리의 권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과제가 된다. 압도당하지 않는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주체되기의 힘겨움으로 인해 푸코는 무정부주의적인 도피전략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Foucault, 2015).

푸코는 모든 권력관계는 이미 저항과 비판을 본래적으로 담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권력과 저항은 동근원적인 관계이며, 상호공속적인 관계맺음의 그물망 속에 구조화되어 있으며, 또한 구조화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코는 주체는 권력의 메커니즘 안에 있으며, 그 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주체가 권력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권력의 그물망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다양한 권력관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무기력하게 만들기’, ‘배제하기’, ‘길들이기’, ‘저항하기’ 등 다양한 모습의 국지적인 형태로 주체가 자기를 변형하며, 권력 또한 다양한 전략의 형태로 재정비되고, 다시 강화되며 변형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누가 권력의 주체이고, 누가 권력의 대상인가에 대한 물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저항이 없는 권력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항은 권력관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형성된다. 권력에 대한 저항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권력이 있는 자리에 저항이 항상 함께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푸코는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권력을 해체하거나,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혹은 정의롭게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권력의 재구성에 대한 거대한 이론을 구축하거나 정형화된 체계가 아니라, 권력의 작동과 투쟁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음을 강조할 뿐이다(Foucault, 1995b).

권력의 메커니즘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권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모두 권력의 효과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유의 이미지이다. 푸코는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의 소유자나, 권력의 행사자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감-을’관계로 상징되는 권력의 그물망은 선형적인 연결이 아니라 원형적인 연결이기 때문이다. 어디가 시초이고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끝인지에 대해 규정지을 수 없다. 푸코는 더 나아가서 권력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 권력이 톱니바퀴와 같은 부품들로 움직이는 복잡한 기계이고, 권력의 모습이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력의 근원이 어느 한 개인으로 환원되어 질 수 없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력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특이성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작동시킬 최소한의 권력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어느 한 개인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몰락시켜야 한다(Foucault, 1995c). 권력의 형태에 상부와 하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권력의 최상부가 근원

혹은 시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권력의 위계질서는 상호보완 관계이기에, 서로 서로를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에 정부 각 부처가 통치당하고 있어서, 마치 정부 부처가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에 귀속된 것 처럼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 각 부처의 권력에 대통령과 총리가 귀속되어 있기도 하다. 푸코의 권력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진실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순환적 구조와 작동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떤 보고는 누락하고, 어떤 보고는 제한적으로 하고, 어떤 보고는 현실과 다르게 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서 관계할 수 있겠는가.

2. 통치성(governmentality)⁶⁾의 의미

푸코는 바람직한 통치술을 개념화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플라톤의 통치술에 기반해서 근대 이후 국가의 통치술에 대해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통치술의 본래적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치술의 본래성이 이러하니,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통치성의 한계를 폭로하고 비판적 물음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에 참고할 뿐이다. 통치(governance)의 어원으로 이해되는 ‘키잡이’의 헬라어는 ‘쿠베르나오(kubernao)’이며, 키잡이의 능력으로서 ‘조타술’은 ‘퀴베르네시스(kybernesis)’이다. 퀴베르네시스는 지금은 ‘방향잡기(steering)’ 혹은 ‘다스리기(governing)’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조타술로서 통치는 본래적으로는 ‘노젓기(rowing)’를 넘어서 ‘방향잡기(steering)’와 관련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정체』를 비롯해서 여러 대화편에서 배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조타술(kybernesis)’을 ‘통치술(art of governance)’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은 어떤 의사든, 그가 의사인 한은 의사에게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지시내리는 일은 결코 없고, 환자를 위해 치료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키잡이와 통치자 역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선원을 위해 즉 통치를 받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플라톤에게 통치는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다스림인 한에 있어서 다스림을 받는 쪽, 돌봄을 받는 쪽을 위한 최선의 것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lato, 2003:342d-345e).

푸코는 플라톤이 제시한 통치에 대한 사유의 이미지를 매개로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물(chose)⁷⁾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6) 통치성으로 번역되는 ‘governmentality’는 ‘governance’와 ‘mentality’의 결합어이다. 멘탈리티는 정신작용. 정신의 구조화하는 힘을 의미하며, 거버넌스는 통치(治)이다. 푸코에게 통치성은 통치이성, 통치합리성, 억압과 배제의 권력을 작동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권력은 복종하는 주체를 예측된 주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서 군주의 권력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은 영토와 거주하는 사람들인 주민이다. 반면 ‘사물’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통치란 단순히 영토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토, 사람, 환경, 식량, 자원, 기후, 풍속, 문화, 습관, 행하고 소유하는 방식, 기근, 전염병, 죽음 등 사물과 인간으로 구성된 복합체와 관계맺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를 한다는 것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토와 인간을 넘어서 ‘인간과 사물의 복합체’인 것이다(Foucault, 2011:146~148).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기에 통치에는 적절한 목적이 있다.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통치는 공동선을 위한 통치이다. 전통적으로 공동선이란 국가안의 모든 주체들이 완벽히 법에 복종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고, 기존 질서를 잘 준수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동선이란 모든 주체들이 통치자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초월적인 위치에서 법을 제시하는 자이기에,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공동선이고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의 목표는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에 주체들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국가를 보전하는 공동선인 것이다. 푸코는 현대 정부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물음을 매개로 플라톤적 통치의 의미를 다시 복원하고 있다(Foucault, 2011:149~151). 그렇다고 해서 통치자가 통치받는 절차를 공정하게 함으로서 주체의 내부와 관계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모든 인간 각자의 적절하고 고유한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사물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에 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곧, 통치자를 신과 같은 존재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치자가 소유한 앎, 국가 전체에 대한 앎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Foucault, 2011:151~152). ‘신이 인간의 목자인 한에서 인간들에게 정치의 필요하지 않았다’라 말한 플라톤의 지적은 통치자들이 신의 대리인인 목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과 관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Plato, 2005:271e). 플라톤(Plato, 2005:275b~c)이 말한 것 처럼 인간의 고유한 몫으로서 통치를 이해할 때 통치이성, 통치합리성으로서 통치성의 존재방식에 대해 우리는 다시 물음을 던지게된다(Foucault, 2011:208~210). 주체를 예측화하는 통치성은 ‘신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악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선동 속에서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한다⁸⁾. 이러한 논리를 통해 통치자들은 주체에 대한 통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통치성⁹⁾의 근거를 한편에서는 합리적

7) 헬.ergon - 시민들이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슈 / 라.res - res publica.공화국이란 전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는 나라이다 / 독.sache - 어떤 것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사대 / 영.matter -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안.이슈

8) 칸트(Kant, 2006:262)는 ‘최고 선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신의 현존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신론(理神論.deism)은 신이 세계를 창조했지만, 그 뒤에는 세계가 자체적인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이론이다. 17~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합리적인 종교관이다. 이신론은 신을 세계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세상일에 관여하거나 계시나 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인격적 주재자로서의 신을 부정한다.

이성의 과학에 다른 한편에서는 신의 진리성에 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전면적 의존관계를 요구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주체를 생산하는 정부의 통치아래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치해야 하는가?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까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다시금 제기된다(Foucault, 2011:132~133).

권력관계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개인을 본래적이고 특이한 개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개인을 분리시키고 다른 자들과의 연대를 부수며 공동체를 금가게 하고, 각 개인을 자신의 뒷편에 서도록 강요하고 자신을 그 자신의 자기정체성(확일화되고 동일성에 간혀있는 ‘너는 그래야만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중에 불과해’와 같은 일련의 판단과 규정들)에 묶어두는 통치성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개인’을 위한 것도, 또한 ‘개인’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개별화의 지배’에 대항하는 투쟁들이다(어떠한 확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분절되고 고립된 개별화가 아니라, 상호공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특이성이 살아 있는 개인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투쟁은 지식의 우월한 위치에 대항하는 투쟁들이다. 과학적인 지식을 절대시 하는 것을 비판하며, 그렇다고 무지하고 신비화한 삶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모든 검증된 과학적 진리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상대주의적인 거부도 아니다. 지식이 권력화되는 모든 관계, 지식의 제도화에 대한 거부이다(Foucault, 1989:302-303).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정부는 자기이해와 효용의 극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통치에 복종하고 예측되는 것이 자기효용이며, 자기성취라는 담론을 통해 예측화하는 주체를 재생산하는 통치성을 보여주고 있다(Foucault, 2012b).

Ⅲ. 주체화, 자기통치, 주권적 삶의 주체

1. 자기통치하는 주체: 주체화하는 주체

푸코는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1982~1983)에서 자신이 그동안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권력제도, 지배의 제도적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타자의 품행을 지도하는 기술과 절차에 관한 것임을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권력이 한 사람의 행위에 규범적인 형식을 제시하고, 행위하도록 하는 권력의 형식, 타자를 통치하는 절차의 장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형식을 분석하고자 했던 것이다. 권력이 주체를 어떻게 처벌하고, 규율하고, 배제하고, 예측화함으로써 주체화의 과정속에서 주

9) 통치이성의 함의에 의하면 국가나 통치자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진리를 보유한 자, 영토와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진리를 보유한 자로 여겨졌다. 진리의 보유자로서 국가에 대한 이해에 매몰되어 있는 한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생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의 진리, 국가의 진리, 국가이성 등은 국가 자체가 보유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 보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Foucault, 2011:482~484).

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푸코는 이것을 통치이성 혹은 통치합리성의 발현으로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주체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새로운 주체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다양한 존재방식에 대한 물음이었다.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주체화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자기관계, 자기에 대한 기술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주체화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통해, 예속된 주체로의 주체화가 아닌 자기통치하는 주체로의 주체화를 위한 자기관계의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다(Foucault, 2010:4~5).

그럼, 입헌민주공화국인 정부의 통치아래에서 각 개인의 자기통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물음은 대리민주주의로 이해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충분히 해명하기에 한계가 많다. 따라서 푸코는 이 부분을 현대의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플라톤의 『정치가』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국가는 통치자인 시민과 피치자인 시민으로 구성되며, 통치자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고, 피치자는 임기가 없는 시민으로 혹은 통치자는 임기가 있는 공직이고, 시민은 임기가 없는 공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통해 현재의 역사에 실천적으로 접목하고 있을 뿐이다(Plato, 2000; Aristotle, 2009). 오늘날 자기통치하는 주체의 임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부하는 일에 가깝다. 국가의 정치적 ‘이중 구속’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중 구속’이란 국가 권력의 작용에 의해 개인들이 ‘개별화’되고 ‘전체화’되는 것의 동시적 작용을 말한다. 오늘날의 정치적,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문제는 국가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에 연결되어 있는 개별화와 전체화의 유형 둘 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에 있다. 우리는 예속화하는 주체에 반대하면서, 주권적 주체성의 새로운 형식을 꾀해 나가야 한다(Foucault, 1989:308~310).

2.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 파르헤시아(parrhesia)

타자에 의해 통치당하는 자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자기통치하는 주체화와 타자를 지배하는 통치가 아닌, 타자가 자기통치하는 주체화의 과정 속에 존재하도록 타자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은 ‘파르헤시아(parrhesia.truth-telling)¹⁰⁾’이다(Foucault, 2010:6~7). 푸코는 파르헤시아¹¹⁾가 어떻게 자신과 타자에 대한 통치의 과정에서 의무와 가능성으로

10) 권력관계에 대한 푸코의 후기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파르헤시아(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는 주체를 구성하는 주체화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타자가 대상화되고, 예속되지 않은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자 삶의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고 있으며, 타자의 통치 역시 타자가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도록 관계맺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파르헤시아는 플라톤의 『라케스』를 비롯해서 여러 대화편과,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문학작품에 등장하지만, 이 개념을 예속되지 않은 주체를 위한 자기통치의 기술로 적용한 것은 푸코의 놀라운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파르헤시아를 통해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타자는 예속된 주체가 아닌 주권적 주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Foucault, 2010:42~43).

푸코는 권력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치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예속된 주체로 대상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예속된 주체로 주체화하는 것을 자기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은 자기통치를 위한 주체의 의무이며, 예속된 주체를 극복하고 자기통치하는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Foucault, 2010:42~43).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돌봄의 기술, 자기배려의 기술, 자기관계의 기술 등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각자도생,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각 주체의 노력으로 알아서 수행하는 사적인 사안이 아니다. 공화국(res publica)으로서 민주공화국이 책임져야 할 공적인 사안(res.Public affairs)인 것이다. 즉 정부의 통치행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인 것이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늘림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접근방식을 선택하는 것 처럼, 주체에 대한 통치를 잘 해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삶의 주체를 생성하는 접근이 아니다. 푸코가 이야기하는 정부 통치의 새로운 존재방식은 과정 속의 주체가, 주체를 구성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에 예속된 삶으로 자기 효용을 경험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적으로 관계해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주권적 주체들이 자기통치가 가능한 한에서 타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향유하는 경험을 하도록 근거지우는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통치아래에서 각 주체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강화하면서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로 주체되기를 하는 것이다.

파르헤시아¹²⁾는 (1)모든 것을 말하고, (2)진실을 말하고, (3)자유롭게 말하고, (4)위험을 감수하고 말하는 용기의 힘이다¹³⁾(Foucault, 2010:43~57). 그리고 이러한 파르헤시아가 가

11) 우리는 적어도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파르헤시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 하리라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자 초대한 것입니다(Plato, 2014:178a4-b5).

12) 파르헤시아(Parrhesia)는 어원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솔직, 마음을 열기, 언어의 개방, 말의 자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해야 할 바를 말하게 하고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게 하며,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게 하는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파르헤시아는 말하기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파르헤시아는 자기 배려의 중요한 자기 기술이고 자기 실천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제자가 성취할 수 있도록 스승은 수사학의 법칙에 복종해야 하고 제자의 영혼에 감동적 효과만을 노리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담론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스승의 담론은 유혹의 담론이 아니라 제자의 주체성이 자기화할 수 있는 담론이어야 합니다(Foucault, 2007:394~396).

13) 파르헤시아의 실제적인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1924~1997)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하였다. 일본군 성

능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역량이나 조건에 내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즉 민주적인 통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주체의 존재방식으로 민주적인 법과 제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Foucault, 2010; Foucault, 2011). 푸코는 특히 주권적 주체로 주체화하는 주체되기는 자기 자신과의 실천적 관계맺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통치에 잘 지배당하는 자기 실천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 관계맺는 자기실천을 통해서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의 자기 기술로서 자기돌봄과 배려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Foucault, 2010:242).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강화하는 자기돌봄의 기술은 진정한 자기관계의 힘으로서 자기 통치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 역시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통치의 힘과 타자에 대한 통치는 인과관계의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통치의 힘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타자와 관계맺음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자기통치의 힘을 키워갈 수 있으며, 자기통치의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그때그때마다 자기돌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Foucault, 2010:61~73). 푸코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으로서 파르헤지아는 주체화의 기술로서 단순히 자기성찰이나 자기반성의 맥락에 놓여 있는 존재방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삶의 존재방식이기에 권력에 대한 비판적 물음과 실천적 저항이 수반되는 자기 기술인 것이다. 이런 한에서 자기통치는 정부 통치성의 복합 그물망과 관계하는 주체화의 실천인 것이다(Foucault, 2010:294~295). 한편으로 파르헤지아는 주체의 권리로서 수사학적 담론을 말하는 기술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는 더욱 더 자기통치가 가능한 주체를 구성해가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기술이 아니라, 주권적 삶의 주체화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Foucault, 2010:358~359).

이러한 자기통치하는 주체되기의 기술을 보여준 전형은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고발을 당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으로부터 무죄로 방면하게 되면, 다시는 아테네 시민들을 괴롭히지도 않으며, 진리를 탐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제안을 받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테네 시민들에게 진리를 향한 캐물음을 할 것임을 고백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는 삶이기 때문이었다(Plato, 2003:29c~30a).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보여준 진리를 말하는 용기의 힘으로서 파르헤지아를 보여주는 소크라테스의 자기통치하는 삶은, 자신이 죽음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고 용기있게 기꺼이 선택한 삶이었다. 푸코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의 삶의 모습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말하는 파르헤지아의 실천임을 강렬하게 보여

노예 문제가 최초로 국제 사회에 제기되었으며,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다.

주고 있다(Foucault, 2011). 파르헤시아의 실천은 궁극적 목적으로서 주체를 선택하거나, 완성된 주체로의 과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통치하는 주체로의 자기변형의 과정인 것이다.

푸코는 콜레쥬 드 프랑스의 마지막 강의였던 『진리를 말하는 용기(The Courage of Truth):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 II』(1983~1984)에서 주체화의 의미에서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파르헤시아의 담론 분석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주체임을 주장하는 것이 진리¹⁴⁾를 말하는 행위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기에 타자에 의해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주체의 행위 형식이 진리로서 인정받는 담론인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는 행위 형식 속에서 또한 진리를 말하는 어떤 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주체의 형식이란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진리를 말하는 주체로서 타자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인 것이다(Foucault, 2011:2~3).

통치에 있어서 하나의 궁극적 목표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재의 자기 존재는, 각자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특이하고 차이화하지만 모두가 바라는 형태에서는 보편적이며, 개인들 간에 설정된 공동체의 연대에 의해서 또한 집단적인 하나의 원칙이다. 자기와의 관계는 차이와 동일성으로서 자기 관계이다. 우리는 차이이다(Foucault, 2004:116~117).

푸코는 『진리를 말하는 용기(The Courage of Truth)』의 마지막 강의에서 파르헤시아를 전면적으로 자기화한 주체는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불신하지 않으며, 이 세계와 타자에 대해서도 불신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파르헤시아는 부끄러움이 없이 타자와 관계맺는 주체의 존재방식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르헤시아는 자기 신뢰와 타자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며, 지속적인 관계맺음을 유지하는 힘이며, 파르헤시아에 의해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는 ‘타자와 더불어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주체’임을 말하고 있다(Foucault, 2011:330~337). 아울러 이런 식으로 자기통치하는 주체의 존재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천적 삶이 가능한 민주주의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함을 푸코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Foucault, 2011).

결론적으로 푸코가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 『진리를 말하는 용기(The Courage of Truth): 자기통치와 타자의 통치 II』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자기통치하는 주체의 의미란,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기통치가 가능한 한에서 타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체되기’로 이해할

14) 푸코의 파르헤시아의 ‘진리(truth)’는 하이데거가 이해한 ‘알레테이아(aletheia.탈은폐)’로서 진리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주체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끔 한다는 접근이다. 진리가 주체안에 전면적으로 자기화될 때에야 비로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드러날 수 있으며, 이것은 고립된 주체의 자기인식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상호적인 관계망속에서 진리가 작동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 있다.

3.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 자기돌봄과 배려의 기술

그럼, 파르헤지아의 힘을 어떻게 주체는 전면적으로 자기화할 있는 것인가? 통치이성, 통치합리성에 의해 통치성이 발현되는 통치화에 대한 푸코의 고민은 ‘전혀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것’도, ‘통치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립’도 아니다. 푸코는 다만,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에 대한 문제였다(Foucault, 2016:44~45). 여기에 대한 푸코의 대안적 처방은 새로운 통치성의 발견이나, 대항품행으로서 더 나은 통치성이 아니었다. 푸코는 오히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타자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다. 물론, 주체를 대상화하고 예측화하는 통치성에 대한 대항품행으로서 푸코가 제시하는 일련의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치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Foucault, 2004; Foucault, 2011). 권력이 생산하는 예측화된 주체에 대한 비판, 진리담론을 생산하는 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한편에서는 불복종의 기술, 불순종의 기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통치하는 주체를 구성하는 주체화의 기술이기도 하다(Foucault, 2016:47~48).

푸코는 칸트가 계몽¹⁵⁾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감히 알고자 하라’로 대변되는 알고자 하는 용기를 불복종을 거부하는 주체의 자기관계의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칸트가 불복종의 주체화를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고 말았지만, 푸코는 칸트가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한 ‘통치받지 않으려는 자유’를 자기통치하는 주체의 자기관계의 기술로 전용하고 있다(Foucault, 2016:50~74). 자기통치하는 주체를 위한 자기관계의 기술은 『주체의 해석학』(1981~1982)에서 부터 『진리를 말하는 용기』(1983~1984)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주된 주제가 되었다.

15)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계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푸코는 칸트의 계몽에 대한 설명을 자기통치하는 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로 전용하고 있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성년의 원인은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요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이다...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따져보라. 그러나 불복종이라고 말하겠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목적을 지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공의 목적을 파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자신을 위해서건 후손을 위해서건 계몽을 단념하는 것은 인류의 신성한 권리를 손상시키고 유린하는 일이다.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국민들이 정신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고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통치하지 못한다면, 통치에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간과하는 자기 자신을 품위있게 대접하는 길이다.’(Kant, 2009:13~22).

푸코는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의 기술을 위해서는 자기인식을 넘어 자기배려와 돌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4가지 관계맺음 속에서 주체를 구성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진리와 맺는 관계, 의무들과 맺는 관계,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타자들과 맺는 관계이다. 이러한 4가지 관계의 기술을 통해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는 주체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Foucault, 2016:100~102). 그런데, 자기수양으로서 자기돌봄, 자기배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관계맺기이다(Foucault, 2016:112~113). 푸코에게 자기(self)라는 개념은 자기와 맺는 여러 관계 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자기는 자기관계인 것이다. 자기는 애초부터 주어져 있는 구조화된 어떤 것이 아니다. 자기는 자기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와 그 관계들의 총체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는 자기와 맺는 관계 속에서 자기로 구축되는 것이며, 주체를 구성하는 것은 곧 자기와 맺는 일련의 관계맺음의 총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인 자기 실천이고 자기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기통치하는 주체란, 규정된 어떤 질서 안에 자신을 편입시키는 것도 아니며, 지향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통치하는 주체는 자기완성, 자기성취, 자기실현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변형하는 주체인 것이다(Foucault, 2016:120~123).

IV. 결론: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를 위한 정부의 통치성

‘자기통치가 가능한 한에서 정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권적 주체’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나라에서, 정부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정부 통치자들에게는 어떤 앎이 요구되는가? 어떤 앎의 기술 위에서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들과 관계하면서 통치할 것인가? 통치를 받는 상대로 하여금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그런 타자의 통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이아몬드는 오직 다이아몬드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된 주권적 주체들의 등장에 따라 정부통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기도 하며,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에게 소위 문자폭탄이라는 것을 받기도 한다. 또한 18원을 후원금으로 입금받고 나서는 후원금영수증 처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모를 요구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과도한 참여라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시대 주권적 주체들의 참여행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계맺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통치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캐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잘 통치하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물음보다 정부의 통치(행정집행을 포괄하는 통치방식)가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들을 예측화하려는 욕구와 유혹을 어떻게 자기극복하는 힘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정부통치의 작동방식은 시민들을 대상화시키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경제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의 틀에 가두고, 예측화하는 것에 익숙하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천착이 힘들고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구조화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능적으로 구조화하고 형식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통치합리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통치행위는 정부가 본래적인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국민복지증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설적이게도 국민복지증진이 존재이유인 정부의 통치행위는 끊임없이 국민복리를 파괴하고 축소시키고, 허약하게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통치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수행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잘못되었다면 어쩔 것인가?

도덕의 역사에 관한 계보학자는 도덕적 가치들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는 현재의 우리가 가치로 받아들일만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선 그 자체로 문제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들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모든 의문과 비판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인간에게 공리, 변영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일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그 반대가 진리라고 한다면, 사정은 어떠한가? 만일 선한 사람이 더 비도덕적이라면, 사정은 어떠한가? 도덕을 따르는 인간 유형이 스스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함과 화려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도덕 때문이라면? 그리하여 도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비도덕적이고, 위험 가운데 최고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Nietzsche, 2013:337~346쪽).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삶의 주체되기는 타자와 더불어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이다. 타자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고, 공동체적인 삶이란, 차이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삶을 각자의 존재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동의 몫으로 전면적으로 자기화한 사람들의 관계망이다. 각자의 존재의 몫을 살아가는 사회인데, 저마다 각자도생, 자력갱생의 방식이 아니라, 주권자 각자가 존재의 몫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법과 제도, 정책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존재의 몫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하고 차이나는 존재의 몫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보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과 배려는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주권적 관심이다. 주권적 돌봄이고, 주권적 배려이고, 주권적 인정이다. 주권적 관심에 의한 인정이다. 주권적 주체인 국민 모두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치행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삶의 주체들이 주도하는 국민주권시대에, 정부의 통치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물음은 아무리 캐물어져도 다함이 없는 본질적인 물음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이다.

V.참고문헌

- Aristotle.(2009). 『정치학』, 천병희 옮김, 서울: 숲
- Foucault, Michell.(1989). 「주체와 권력」,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옮김. 나남.
- .(1995). 『권력과 지식』, 홍성민 옮김. 나남.
- .(2000).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 .(2004). 『성의역사 3』, 이혜숙·이영목 옮김, 나남.
- .(2007).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옮김, 동문선.
- .(2010).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나남.
- .(2011). 『안전.영토.인구』, 오트르망 옮김, 서울: 난장.
- .(2012a).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
- .(2012b).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난장.
-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 옮김, 난장
-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자기수양』, 심세광·전혜리 옮김, 동녘.
- Mills, Sara.(2008).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옮김. 엘피.
- Nietzsche, F.(2013).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학』, 김정현 옮김, 책세상
- Kant, I.(2006).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 .(2009). 『칸트의 역사철학』, 이한구 옮김. 서광사.
- Plato.(2000). 『정치가』, 김태경 옮김, 서광사.
- .(2003). 『국가.정체』, 박종현 옮김, 서광사.
- .(2003). 『소크라테스의 변론』, 박종현 옮김, 서광사.
- .(2014). 『라케스』, 한경자 옮김. 이제이북스.
- Rawls.(2006).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 Foucault, Michell.(2000). The Subject and Power. In James D. Faubion (eds.), *Power*, trans. R. Hurley, et al., New York: The New Press. 326-348.
- .(2005) *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81-1982.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 .(2010). *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82-1983.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icador.
- .(2011). *The Courage of Truth: 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 II*.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83-1984.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